바이오디젤에 교통세 부과 논란

대두·유채기름+경유…친환경 에너지
재경부 "무조건 면세 연장할 수 없다"
환경단체 "태양광엔 큰 혜택 주면서…"

대두·유채·자트로파 같은 식물 열매의 기름으로 만든 바이오디젤에 교통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 면세를 연장하지 않고, 내년부터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의 25% 수준에서 과세하는 방침을 굳혔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라 최근 관계부처 조정회의에 이를 결정하려 했으나, 업계 반발과 부처 간 이견으로 안건 상정을 취소·연기했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바이오디젤의 비용과 성능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데 무조건 면세를 연장할 수 없다는 태도이고, 업계나 시민단체·산자부·농림부 등에선 고유가에 대비한 친환경 대체에너지로서 오히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급 실태**=산업자원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수송용 경유에 0.5%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비디 5'를 전국 주유소를 통해 보급하고 있다.

현재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는 순천의 B&D 등 16곳으로 총 생산능력은 연간 약 67만㎘에 이르지만, 실제 정유업계가 구매해서 경유와 섞어 판매하는 물량은 연간 9만㎘에 불과하다. 더욱이 산자부는 '비디 5'를 판매하는 대신 2002년부터 보급해온 '비디 20'(바이오디젤 20%+경유 80%)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바이오디젤 원액 생산업체의 가동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

◇**과세논란**=현재 우리나라 경유 사용량은 2천만 ㎘. 업계에선 이중 20%만 바이오 디젤을 사용해도 연간 1조6천억원 정도의 수입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BD 5'의 바이오 디젤 함유량을 내년 1월부터 현재 0.5%에서 1%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유가 시대에 탈 석유를 위한 대안으로 가장 유력한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가 바이오디젤이기 때문이다.

바이오디젤 이용 촉진운동을 펴온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비디 20'만 쓰더라도 대기중 독성물질을 20~40% 줄이고 CO_2를 16% 줄여 대기 환경 개선과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농림부도 한미 FTA에 따른 농민 소득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전남·전북·제주도에 각 500㏊의 유채유를 재배하는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며, 서울시도 청소차량에 '비디 20'을 사용하고 있다.

▲바이오디젤(biodiesel)=대두·유채·자트로파 같은 식물 열매의 기름을 특수 공정으로 가공, 경유와 혼합해 만든 디젤 기관의 연료. 오염물질 배출이 화석연료에 비해 적어 경유를 대체할 친환경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의 경우 원료가 대부분 국외에서 수입돼 농가소득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25%의 교통세를 부과하더라도 바이오디젤 생산원가가 경유보다 약간 싸다며 무조건 면세를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시민환경회의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태양광 에너지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혜택을 주면서도 농촌 회생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바이오디젤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세금 부과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이르면 2011년부터 바이오디젤 생산 원가가 경유보다 싸질 것"이라며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영광 등지에서 나온 유채 기름을 경유에 섞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는 순천 B&D사. 최근 정부 일각에서 바이오디젤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생산업계와 환경단체 등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호남정맥·금남호남정맥 10개 지점 생태통로 설치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

〈Road-Kill〉

작년 전남서 너구리 등 257마리 숨져

야생동물 '로드킬'(Road-Kill) 예방을 위해 2012년까지 호남지역의 생태 축인 호남정맥, 금남호남정맥의 10개 지점에 생태통로가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 ·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로건설 증가로 야생동물이 자동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이 빈발하는데다 호남정맥 48개, 금남호남정맥 9개 지점이 도로관통으로 생태 축이 단절돼 생태통로의 효과적인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주변 생태계와 지형구조, 로드킬 발생빈도 등을 고려해 2012년까지 호남정맥, 금남호남정맥의 10곳을 생태통로 우선 설치지점으로 선정했다.

우선 순위 국도는 화순에서 보성을 잇는 58번 국도를 포함해 호남정맥 5곳, 전북 장수의 743 지방도 등 금남호남정맥 5곳이다.

또 해당기관 담당자 및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생태통로 조사단'을 꾸려 생태통로 설치 전 · 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정책 조언을 하도록 했으며 야생동물의 종류에 맞게 육교형 · 파이프형 생태통로 등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환경부 등 3개 기관의 조사결과 2005년 64종 6천543마리, 지난해 84종 5천565마리의 야생동물 사체가 도로에서 발견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운전자가 경북지역의 62개 로드킬 빈발 지점을 지날 때 네비게이션에서 '야생동물 출현주의' 안내방송이 나오게 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전남의 41개 국도 및 지방도에서 로드킬에 의해 희생된 야생동물은 257개체. 포유류가 190개체(73.9%)로 가장 많았고 ▲조류 30(11.7%) ▲파충류 20(7.8%) ▲양서류 17(6.6%) 순이었다.

동물별로는 ▲너구리 80개체(31.1%) ▲족제비 69(26.8%) ▲다람쥐 20(7.8%) ▲꿩 17(6.6%) ▲능구렁이 10(3.9%) ▲멧토끼 10(3.9%) 개체로 나타났다.

로드킬이 가장 자주 일어난 곳은 ▲진도~구례 18번 국도(38건) ▲목포~무안 1번 국도(24건) ▲완도~담양 13번 국도(21건) 등이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호남정맥(湖南正脈)=전북 무주군 주화산(珠華山·600m)에서 시작하여 내장산(內藏山·763m)을 지나 전남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광양시 백운산(白雲山·1천215m)까지 약 400km 이르는 산줄기의 이름.

▲금남호남정맥(錦南湖南正脈)=전북 장수군 장안산(長安山·1천237m)에서 서북으로 뻗어 무주군 주화산(珠華山·600 m)까지 약 65km에 이르는 산줄기.

먹는 물 기준 깐깐해진다

납·비소·망간·크롬 등 수질기준 강화

환경부는 WHO(세계보건기구)등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 납 · 비소 · 망간 · 6가크롬 등 4개 항목의 기준을 강화하고, 1,4-다이옥산 ·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등 3개 항목을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으며 국제기준보다 너무 엄격한 보론 · 아연 등 2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물에 금속성 맛을 내는 망간은 0.3㎎/ℓ에서 0.05㎎/ℓ, 유아와 어린이에게 축적될 수 있는 납과 발암물질인 비소는 각각 0.05㎎/ℓ에서 0.01㎎/ℓ, 6가크롬은 총 크롬 기준으로 바뀐다.

수돗물에서 검출빈도가 높고,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된 1,4-다이옥산은 0.05㎎/ℓ, 브로모디클로로메탄(발암성) 0.03㎎/ℓ, 디브로모클로로메탄(간독성) 0.1㎎/ℓ으로 신규기준이 정해졌다.

보론은 일부 섬지역에서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했을 때 정수가 어렵고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기준이 1㎎/ℓ인 점 등에 비춰 기준을 0.3㎎/ℓ에서 1㎎/ℓ로 완화했다. 하지만 WHO기준(0.5㎎/ℓ)보다는 높다.

■먹는 물 수질 기준 항목별 개정안

개정	대상 항목	현행(㎎/L)	개정(안)(㎎/L)
강화(4개)	납	0.05	0.01
	비 소	0.05	0.01
	망 간	0.3	0.05
	6가크롬(크롬)	0.05	(0.05)
신설(3개)	1,4-다이옥산	–	0.05
	브로모디클로로메탄	–	0.03
	디브로모클로로메탄	–	0.1
조정(2개)	보 론	0.3	1.0
	아 연	1	3

아연도 3㎎/ℓ 이내면 인체에 무해하다고 보고, 기준을 1㎎/ℓ에서 3㎎/ℓ로 변경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6가크롬 · 브로모디클로로메탄 · 디브로모클로로메탄 · 보론 · 아연에 관한 규정은 2009년 1월1일부터, 1,4-다이옥산 · 납 · 비소 · 망간 관련 규정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13개 단체, 오늘부터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영산강살리기 네트워크'는 26일부터 5일간 '제2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를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도보와 자전거, 선박 등을 이용해 강 본류 전 구간을 탐사하며 영산강을 몸으로 느끼게 된다.

탐사에는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영산강의 옛 뱃길에 대한 해설과 영산강과 관련된 각종 개발 사업현황, 강 유역의 문화와 역사 등 영산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도 포함돼 있다.

참가자들은 영산강 하류에서 출발해 영산강의 시발점인 담양군 용면 용소까지 강을 거슬러 탐사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환경운동연합 자연캠프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부터 2박3일 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칠게와 백합을 찾아가는 여행이야기' 자연캠프를 연다.

캠프 장소는 전북 김제 심포 갯벌과 부안 그레 갯벌 배움터. 프로그램은 ▲새만금방조제 견학 및 주민과의 대화 ▲조개 줍기 ▲도요새 관찰 ▲새만금 관련 영상물 시청 ▲물놀이 ▲벽화 그리기 등이다. 비용은 10만~11만원. 문의 (062)514-2470.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수질기준 위반 환경기초시설 75곳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광주·전남 환경기초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5일 하수종말처리장 등 관내 환경기초시설 357곳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 수질기준을 초과한 7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곳이 71곳으로 가장 많고, 맨홀 및 하수관에 퇴적물을 방치해 오수를 정체시키는 등 시설운영을 부적절하게 한 곳이 4곳이었다.

환경청은 위반이 적발된 시설들에 대해 하수도법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에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다.

환경청 관계자는 "적발된 시설 가운데 1일 처리 하수 용량이 50~500㎥인 마을 하수도의 수질기준 위반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